

사회적기업 인증조건에 따른 준비사항

사회적기업 :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여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등의 '사회적목적'을 추구하면서 재화 및 서비스의 생산·판매 등 '영업활동'을 수행하는 기업

1. 조직 형태

신청 내용	구비 서류	비고
<input type="checkbox"/> 민법상 법인·조합 <input type="checkbox"/> 상법상 회사 <input type="checkbox"/> 비영리 단체 <ul style="list-style-type: none"> <input type="checkbox"/>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익법인 <input type="checkbox"/>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 <input type="checkbox"/>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input type="checkbox"/>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에 따른 생활협동조합 <input type="checkbox"/> 그 밖에 다른 법률에 의한 비영리단체 <input type="checkbox"/> 법인 내 사업단 	[법인임을 증명하는 서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법인설립허가증 ○ 비영리민간단체등록증 (주무부처, 허가(등록)날짜 기재) ○ 법인등기부등본 ○ 사업자등록증 <div style="display: flex; align-items: center; margin-left: 400px;"> <div style="border-left: 1px solid black; padding-left: 5px; margin-left: 10px;">택 1</div> <div style="margin-left: 10px;">필수</div> </div>	[한시적으로 법인내 사업단 인증 가능] <ol style="list-style-type: none"> 비영리법인·단체 산하 사업단이 사회적기업 활동을 주 목적으로 하고 있는 경우에는 '법인 내 사업단' 이름으로 인증(2년 내에 조직 독립) 모법인과 회계·인사의사결정 등에 있어 실질적으로 독립을 원칙으로 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증신청일까지 회계장부 및 통장 분리, 모법인의 사업단 수익금 전용 금지 준수, 급여대장 분리, 별도 운영규정을 제정시 인정 ※ 다만, 사업단이 모법인으로부터 외형적으로 분리 독립하는 경우에도 모법인이 실질적인 창업자로서 설립이념 준수를 내부강제할 수 있다는 점과 정부재정지원시 계약 주체로서 사회적 책임을 이행할 법적 책임이 존재함을 고려할 때, 모법인 임직원의 사업단 비상임 임원직 겸임은 인정 가능(다수의 대표직 겸임은 불가) 중앙회 연합회 지부가 신청하였으나, 별도의 조직 독립이 안되어 있고, 별도 정관이 아닌 중앙회의 것을 제출한 경우(예, 00협회의 각 지부)에는 불인정 사회복지법인은 사회복지사업법상의 총돌로 인해 '법인 내 사업단'의 형식으로 신청 법인내 사업단 인증 신청시 2년 이내 '분리독립 계획서'(독립 절차 및 추진일정 등)를 별첨하도록 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모법인의 시설·교육지원 등으로 사업의 특성상 분사·독립이 매우 곤란한 특수한 경우에만 사업단 형태 유지를 인정
① (영리)상법상 <주식회사> ② (영리)상법상 <유한회사> ③ (영리)상법상 <합명회사> ④ (영리)상법상 <합자회사> ⑤ (비영리)민법상 <사단법인> ⑥ (비영리)민법상 <재단법인> ⑦ (비영리)민법상 <조합법인> ⑧ (비영리)공익법인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상 <공익법인> ⑨ (비영리)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상 <비영리민간단체> ⑩ (비영리)사회복지사업법상 <사회복지법인> ⑪ (비영리)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상 <소비자생활협동조합> ⑫ (비영리)기타법상 <비영리단체>	[사업단 구비 서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모법인 정관 : 사업단 명 기재 ○ 모법인 이사회회의록(공증 필) : 모법인 사업단의 사회적기업 인증에 관한 내용 포함 [불인정 서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자등록증(개인사업자·간이과세자), ○ 고유번호증 ○ 장애인복지시설신고증 ○ 자활공동체인정서 	

신청 내용	구비 서류	비고
<p>[독립된 법인에 한하여 인증] 사회적기업으로 인증 받기 위해서는 독립된 조직형태를 갖추어야 함. 그러므로 조직의 부서·사업단 등은 원칙적으로 사회적기업으로 인증 받을 수 없음.</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독립법인 형태의 지부 뿐만 아니라 등기부상에 지부가 명시되어 있고 회계·인사의사결정 등이 중앙회 본부와 독립 운영된다는 사실을 입증하는 경우(예: 본부의 법인 이사회회의록 공증 제출 등) 2. 별도의 조직 독립이 안 되어 있고 정관 등도 별도가 아닌 중앙회의 것을 제출한 경우에는 불인증 3. 모법인에서 독립하여 분리중이나, 행정적 절차가 완료되지 않은 경우는 불인증 	<p>[정부·공공기관, 지자체의 출연기관 불인증]</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사회적 목적의 추구를 위해 자발적으로 조직된 단체가 아닌 정부·공공기관의 출연기관 또는 지자체의 출연을 받아 운영하는 장애인시설 등은 불인증 2. 정부출연연구기관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3조의 ‘정부출연연구기관’(정부가 출연하고 연구를 주목적으로 하는 기관)은 불인증 3.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의 ‘공공기관’의 경우 불인증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다른 법률에 따라 직접 설립되고 정부가 출연한 기관 2. 정부지원액이 총수입액의 2분의 1을 초과하는 기관 3. 정부가 100분의 50이상의 지분을 가지고 있거나 100분의 30이상의 지분을 가지고 임원 임명권한 행사 등을 통하여 당해 기관의 정책 결정에 사실상 지배력을 확보하고 있는 기관 4. 정부와 제1호, 제3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이 합하여 100분의 50이상의 지분을 가지고 있거나 100분의 30 이상의 지분을 가지고 임원 임명권한 행사 등을 통하여 당해 기관의 정책결정에 사실상 지배력을 확보하고 있는 기관 5. 제1호 내지 제4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이 단독으로 또는 두개 이상의 기관이 합하여 100분의 50 이상 이상의 지분을 가지고 있거나 100분의 30 이상의 지분을 가지고 임원 임명권한 행사 등을 통하여 당해 기관의 정책 결정에 사시리상 지배력을 확보하고 있는 기관 6. 제1호 내지 제4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이 설립하고, 정부 또는 설립기관이 출연한 기관 </div>	<p>[사업단의 독립성 여부 판단 기준]</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인증신청일까지 회계장부 및 통장 분리, 모법인의 사업단 수익금 전용 금지 준수, 급여대장 분리, 별도 운영규정을 제정시 인정 2. 모법인 임직원의 사업단 비상임 임직원 겸임은 인정가능(다수의 대표직 겸임은 불가) 3. 기술지원 등 모법인이 사업단 활동을 지원하여 모법인과 실질적 독립이 어려운 경우, 모법인의 사업단 지원에 대한 정당한 대가 지불은 2년의 범위 내에서 한정적으로 허용(고용지원센터와 권역별 지원기관의 지도 점검을 실시함) <p>[동일 모법인 산하에 여러 사업단의 인증] 사회적기업 내 복수의 사업단을 구성하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만 허용</p> <p>[개인사업자 불인증] ☞ 개인사업자 및 상법상 회사가 법인을 설립할 경우 설립 이후 6개월의 영업 실적이 필요함</p>

2. 사회적목적 실현

신청 내용				구비 서류		비고																																																																						
<div><input type="checkbox"/> 일자리제공형</div> <div><input type="checkbox"/> 사회서비스제공형</div> <div><input type="checkbox"/> 혼합형</div> <div><input type="checkbox"/> 기타형</div>				[취약계층 증빙 서류]		[‘취약계층’의 구체적 기준]																																																																						
<table><tr><td>근로자</td><td>전체근로자(A)</td><td>취약계층 고용(B)</td><td>취약계층 고용 비율(B/A)</td></tr><tr><td></td><td>-</td><td>-</td><td>-</td></tr><tr><td>서비스 수혜자</td><td>전체서비스 수혜자(A)</td><td>취약계층 수혜자(B)</td><td>취약계층 수혜자 비율(B/A)</td></tr><tr><td></td><td>-</td><td>-</td><td>-</td></tr></table>				근로자	전체근로자(A)	취약계층 고용(B)	취약계층 고용 비율(B/A)		-	-	-	서비스 수혜자	전체서비스 수혜자(A)	취약계층 수혜자(B)	취약계층 수혜자 비율(B/A)		-	-	-	<table><tr><th>취약계층</th><th>구비서류</th></tr><tr><td>저소득층</td><td>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갑종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 원천징수확인서(세무서)·수급자증명서·차상위계층확인서·복지대상자 급여신청결과통보서·건강보험료납입고지서(납부영수증)·소득금액증명(국세청)·급여명세표 등</td></tr><tr><td>장애인</td><td>복지카드·상이군경회원증·장애인증명서</td></tr><tr><td>고령자</td><td>주민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 주민등록증·운전면허증 사본 등)</td></tr><tr><td rowspan="7">근로자 기타</td><td>모부자 가정</td><td>모부자가정증명서,</td></tr><tr><td>새터민</td><td>탈북자증명서(북한이탈주민등록확인서)</td></tr><tr><td>여성가장, 청년실업자</td><td>고용보험상 신규고용촉진장려금지급 대상자 기준에 준하여 확인</td></tr><tr><td>장기 실직자</td><td>노동부 고용지원센터 담당자 고용보험전산망 및 민간취업알선기관의 구직등록일 이후 실업기간 확인</td></tr><tr><td>결혼 이주 여성</td><td>외국인등록증상 F-2, 국적취득에 의한 신규등록이 표시된 주민등록등본, 기타 외모, 언어, 주변인 확인 가능</td></tr><tr><td>경력단절 여성</td><td>고용보험 이력에 의해 이직 사유 확인, 전국가구월평균 소득증빙 자료</td></tr><tr><td>출소자</td><td>출소자증명서</td></tr><tr><td>수혜자 기타</td><td>조손가정, 다문화가정, 금융채무불이행자 및 저신용자(신용등급 7~10등급),</td></tr></table>		취약계층	구비서류	저소득층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갑종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 원천징수확인서(세무서)·수급자증명서·차상위계층확인서·복지대상자 급여신청결과통보서·건강보험료납입고지서(납부영수증)·소득금액증명(국세청)·급여명세표 등	장애인	복지카드·상이군경회원증·장애인증명서	고령자	주민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 주민등록증·운전면허증 사본 등)	근로자 기타	모부자 가정	모부자가정증명서,	새터민	탈북자증명서(북한이탈주민등록확인서)	여성가장, 청년실업자	고용보험상 신규고용촉진장려금지급 대상자 기준에 준하여 확인	장기 실직자	노동부 고용지원센터 담당자 고용보험전산망 및 민간취업알선기관의 구직등록일 이후 실업기간 확인	결혼 이주 여성	외국인등록증상 F-2, 국적취득에 의한 신규등록이 표시된 주민등록등본, 기타 외모, 언어, 주변인 확인 가능	경력단절 여성	고용보험 이력에 의해 이직 사유 확인, 전국가구월평균 소득증빙 자료	출소자	출소자증명서	수혜자 기타	조손가정, 다문화가정, 금융채무불이행자 및 저신용자(신용등급 7~10등급),	<table><tr><th>구분</th><th>1인</th><th>2인</th><th>3인</th><th>4인</th><th>5인 이상</th></tr><tr><td>평균소득</td><td>1,299,461</td><td>2,417,176</td><td>3,416,422</td><td>3,946,614</td><td>4,302,881</td></tr><tr><td>60%</td><td>779,677</td><td>1,450,305</td><td>2,049,853</td><td>2,367,969</td><td>2,581,728</td></tr><tr><td>70%</td><td>909,623</td><td>1,692,023</td><td>2,391,495</td><td>2,762,630</td><td>3,012,016</td></tr></table> <p>※ 출처 : 통계청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가계수지</p> <div>2. 「고령자고용촉진법」에 따른 고령자(55세 이상)</div> <div>3.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른 장애인(중증 장애인 포함)</div> <div>4. 성매매 피해자 : 성매매 하도록 강요, 알선 당한자 등</div> <div>5. 장기실직자 등 노동부장관이 취업상황 등을 고려하여 취약계층으로 인정한 자(북한이탈주민, 노숙자, 모자가정, 경력단절여성, 청년실업자, 결혼이민여성 등)</div> <div><div>장기 실업자 : 고용 자격기준은 취업 비경력자를 고려하여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이력내역 조회뿐만 아니라 고용센터 또는 민간 취업알선기관(직업소개소 포함) 등의 구직등록일로부터 6개월이 지난 자 인정(예비사회적기업 일자리 창출사업에서 장기실직자로 인정된 경우, 구직등록하지 않았더라고 인정)</div><div>경력 단절 여성 :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법」상 경력단절여성(임산·출산·육아와 가족구성원의 돌봄 등을 이유로 경제활동을 중단하였거나 경제활동을 한 적이 없는 여성 중에서 취업을 희망하는 여성) 중 가구 월평균소득이 전국 가구 월평균 소득의 70/100 이하인 여성을 의미함</div><div>청년 실업자 : 고용보험상 신규고용촉진장려금 대상자</div><div>① 고등학교 졸업 이하 학력인 실업자(고용안정정보망 구직표-학력)</div></div>						구분	1인	2인	3인	4인	5인 이상	평균소득	1,299,461	2,417,176	3,416,422	3,946,614	4,302,881	60%	779,677	1,450,305	2,049,853	2,367,969	2,581,728	70%	909,623	1,692,023	2,391,495	2,762,630	3,012,016
근로자	전체근로자(A)	취약계층 고용(B)	취약계층 고용 비율(B/A)																																																																									
	-	-	-																																																																									
서비스 수혜자	전체서비스 수혜자(A)	취약계층 수혜자(B)	취약계층 수혜자 비율(B/A)																																																																									
	-	-	-																																																																									
취약계층	구비서류																																																																											
저소득층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갑종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 원천징수확인서(세무서)·수급자증명서·차상위계층확인서·복지대상자 급여신청결과통보서·건강보험료납입고지서(납부영수증)·소득금액증명(국세청)·급여명세표 등																																																																											
장애인	복지카드·상이군경회원증·장애인증명서																																																																											
고령자	주민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 주민등록증·운전면허증 사본 등)																																																																											
근로자 기타	모부자 가정	모부자가정증명서,																																																																										
	새터민	탈북자증명서(북한이탈주민등록확인서)																																																																										
	여성가장, 청년실업자	고용보험상 신규고용촉진장려금지급 대상자 기준에 준하여 확인																																																																										
	장기 실직자	노동부 고용지원센터 담당자 고용보험전산망 및 민간취업알선기관의 구직등록일 이후 실업기간 확인																																																																										
	결혼 이주 여성	외국인등록증상 F-2, 국적취득에 의한 신규등록이 표시된 주민등록등본, 기타 외모, 언어, 주변인 확인 가능																																																																										
	경력단절 여성	고용보험 이력에 의해 이직 사유 확인, 전국가구월평균 소득증빙 자료																																																																										
	출소자	출소자증명서																																																																										
수혜자 기타	조손가정, 다문화가정, 금융채무불이행자 및 저신용자(신용등급 7~10등급),																																																																											
구분	1인	2인	3인	4인	5인 이상																																																																							
평균소득	1,299,461	2,417,176	3,416,422	3,946,614	4,302,881																																																																							
60%	779,677	1,450,305	2,049,853	2,367,969	2,581,728																																																																							
70%	909,623	1,692,023	2,391,495	2,762,630	3,012,016																																																																							
<div>[사회적목적 실현 유형]</div> <div>○ 일자리제공형 : 전체 근로자 중 취약계층의 고용 비율 30% 이상</div> <div>○ 사회서비스제공형 : 사회서비스를 제공 받는 취약계층의 비율 30% 이상</div> <div>○ 혼합형 : 전체 근로자 중 취약계층비율과 사회서비스를 제공받는 취약계층비율 각 20% 이상</div> <div>○ 기타형 : 사회적목적실현 여부를 취약계층 고용비율과 사회서비스 제공비율 등으로 판단하기 곤란한 경우</div>																																																																												
<div>[사회적목적 실적 증빙 기간]</div> <div>사회적 목적 실현은 ‘영업활동을 통한 수입’ 기간과 동일하게 6개월 동안의 실적을 제출해야 함</div>																																																																												

신청 내용	구비 서류	비고																
<p>[기타형(지역사회공헌형)]</p> <p>1. 취약계층에게 일자리 또는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나, 비율을 계량화하기는 곤란한 경우 / 지역 주민의 삶의 질 향상 등 지역사회에 대한 공헌을 통해 사회적 목적을 추구한다고 특별히 인정하는 경우</p> <p>* 구체적 수치화가 가능한 경우 취약계층 고용비율 및 취약계층 서비스 제공 비율을 기재</p> <p>2. 조직의 설립취지, 조직이 해결하고자 하는 사회문제와 그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 취약계층 참여 및 지원정도, 지역사회 기여·공헌도, 참여자·수혜자에 대한 복지 프로그램 구비 여부 등을 종합하여 판단</p> <p>* 취약한 농촌·도시지역의 발전을 위해 지역사회를 개발(예 : 여행상품)하여 낙후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p> <p>* 특정지역의 사회적 건강·환경·일자리창출·지역경제 향상을 목적으로 친환경 생산·가공·분배·지역소비 촉진 등의 로컬푸드 활동 수행</p> <p>* 문화·예술 활동을 통해 특정지역의 문화소외계층에게 공연서비스를 제공하거나 문화재 보호 등의 업무를 수행</p> <p>* 산림분야 문화·휴양 서비스, 산물수집 등을 통한 신재생에너지 생산·가공·판매 및 저소득층 연로지원 사업을 수행</p> <p>* 현지 생산자들의 안정적인 상품 생산·소득 보장을 위해 공정한 가격으로 생산품을 구매 및 특정 빈곤국가 개발</p> <p>* 기업의 사회공헌활동의 일환으로 자회사 등을 설립하여 취약계층의 삶의 질 제고를 위한 경제활동</p> <p>* 그 밖에 노동부장관이 육성전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인정하는 경우</p>	<p>○ 사회서비스 추진 실적 증빙 시</p> <p>※ 취약계층 대상 무료 서비스 제공, 비용할인율을 달리하는 차등제(가구 소득별 또는 수혜자 특성별), 지역별 시장가격을 고려한 서비스 가격제도 등 인정</p> <p>※ 서비스 수혜인원 등이 기재되거나 추정 가능한 물품공급(용역)계약서, 사회서비스 의뢰서, 서비스 위탁관련 계약서·협약서 인정(간병인 파견을 위한 환자의뢰서, 서비스 수혜자의 성명과 서명이 기재된 간병신청서, 진료기록부 등 인정)</p> <p>[사회서비스 범위]</p> <p>1. 사회서비스란 : 개인 또는 사회전체의 복지증진 및 삶의 질 제고를 위해 사회적으로 제공되는 서비스</p> <p>2. 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 제시된 사회서비스의 범위는 구분류 상의 O,P,R,Q,S,M의 일부를 포함(예비사회적기업 일자리 창출사업 시행지침상 분류와 동일)</p> <table><tr><th>표준산업분류(구분류)</th><th>표준산업분류(신분류)</th></tr><tr><td>O.교육서비스업</td><td>P. 교육서비스업</td></tr><tr><td>P.보건 및 사회복지사업</td><td>Q. 보건 및 사회복지사업</td></tr><tr><td>R.기타 공공, 수리 및 개인서비스업</td><td>E. 하수,폐기물처리, 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td></tr><tr><td></td><td>S.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td></tr><tr><td>Q.오락·문화·운동서비스</td><td>R.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td></tr><tr><td>S.가사서비스업</td><td>T. 가구내 고용활동 및 달리 분류되지 않은 자가소비생산활동</td></tr><tr><td>M.사업서비스업</td><td>N.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서비스업</td></tr></table>	표준산업분류(구분류)	표준산업분류(신분류)	O.교육서비스업	P. 교육서비스업	P.보건 및 사회복지사업	Q. 보건 및 사회복지사업	R.기타 공공, 수리 및 개인서비스업	E. 하수,폐기물처리, 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		S.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	Q.오락·문화·운동서비스	R.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S.가사서비스업	T. 가구내 고용활동 및 달리 분류되지 않은 자가소비생산활동	M.사업서비스업	N.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서비스업	<p>② 대학 졸업 후 6개월이 지나고 미취업 상태에 있는 자로서 고용보험 피보험기간이 연속하여 6개월 미만인 자(대학졸업증명서, 고용보험 피보험자 이력조회)</p> <p>③ 「청소년복지지원법」에 따른 특별지원 청소년 : 매년 시장·군수·구청장이 선정(선정 통보문)</p> <p>④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에 따른 비진학청소년 : 실업계를 제외한 고등학교 3학년에 재학중인 자 중 대학에 진학하지 아니할 것으로 예정된 자(학교장 발행 재학증명서)</p> <p>⑤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상 학교에 재학중이지 않으며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의 수강 중이거나 상급학교 진학취업을 위한 학원 등 수강 중이 아닌 미취업자로서 “청년층 뉴스타트 프로젝트”대상자 중 NEED족에 선정된 자(청년층 뉴스타트 프로젝트 담당자 확인서)</p> <p>⑥ 「청년고용촉진특별법」 제8조의4에 따라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에 대해 개인별 종합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는 ‘청년층 뉴스타트 프로젝트’에 참여 중이거나 사후관리기간 중에 있는 자</p> <p>6. 제공하는 서비스 특성에 따라 조손가정, 다문화가정, 외국인근로자, 금융채무불이행자 및 저신용자(신용등급 7~10등급) 등을 포함하여 탄력적으로 인정</p> <p>[취약계층 인정 기간]</p> <p>자활사업 또는 사회적일자리 등의 사업 수행기관의 경우, 취약계층에 대한 최초 고용 또는 사회서비스 제공일을 기준으로 3년 이내에는 사회적기업의 취약계층으로 인정</p>
표준산업분류(구분류)	표준산업분류(신분류)																	
O.교육서비스업	P. 교육서비스업																	
P.보건 및 사회복지사업	Q. 보건 및 사회복지사업																	
R.기타 공공, 수리 및 개인서비스업	E. 하수,폐기물처리, 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																	
	S.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																	
Q.오락·문화·운동서비스	R.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S.가사서비스업	T. 가구내 고용활동 및 달리 분류되지 않은 자가소비생산활동																	
M.사업서비스업	N.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서비스업																	

특정 분야의 사회적 목적 실현

○ 영리 청소, 경비업체 등의 경우

시장의 특성상 취약계층을 고용할 수 밖에 없는 구조이므로 복리후생 개선, 지역사회 재투자 실적 등이 별도로 증빙되어야 인증 가능

※ 단, 중증장애인, 조손가정, 노숙자를 고용하는 기관의 경우 별도의 사회적 목적 실현 불필요

○ 직업훈련기관과 노인장기요양기관의 경우

1. 정부가 정한 훈련단가에 의해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2. 정부 제도 기준에 의거하여 서비스 대상자 및 단가가 정해지는 경우

☞ 사각지대 계층 서비스 제공실적 및 지속성 여부, 지역사회 재투자, 일반노동시장으로의 취업실적, 별도의 일 경험 및 심층상담 제공 등의 별도 증빙 필요

○ 소비생협 등 친환경생산물 유통업의 경우

☞ 물품이나 대상업체 선정 시 지역고용 창출 및 취약계층 노동조건 개선효과 고려 여부, 투명하고 공정한 제품선정 절차, 적정한 유통 마진율, 사회적기업 등 취약계층 생산물 거래 비중도, 타 기업사회공헌과의 차별성 등을 고려하여 사회적목적 실현 인정

○ 장기요양보험기관의 경우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서 정한 서비스 수혜대상 및 단가가 정해지고 영업활동 수익을 건강보험공단에서 지급받는 기관은

1. 별도의 사회적 목적 실현에 대한 실적을 법 및 제도상 서비스 대상이 정해지는 취약계층 이외의 '별도의 취약계층에 대한 무료 또는 저가의 서비스 제공 실적'으로 인증여부 판단

2. 이 경우, 일자리 및 서비스 제공 실적의 구체화가 가능하므로 기타형(지역사회공헌형)으로 인증신청 불가

3. 인증 유형과 무관하게(일자리제공형 포함), 별도의 취약계층에 대한 사회서비스 제공실적을 최소한 혼합형 수준(20%)으로 제출하여야 함

☞ 사회서비스 제공형으로 신청할 경우 별도 취약계층에 대한 30% 이상의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함

☞ 다만 별도 취약계층에 대한 20~30% 이상의 서비스 제공 실적을 계산할 때
①서비스 제공 대상(전체 10명에 서비스 제공시 별도 취약계층 2명에 서비스 제공), ②서비스 제공시간(총 100시간 서비스 제공시 별도 취약계층에 20시간 이상 서비스 제공), ③서비스 제공 횟수(총 100회 서비스 제공시 별도 취약계층에 20회 서비스 제공) 등의 기준으로 가능

○ 근로작업장, 자회사형표준사업장의 경우

☞ 타 법을 위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사회적기업의 사회적 목적 실현으로 인정 가능

3. 유급근로자 고용

신 청 내 용	구비 서류	비고												
<p>유급근로자를 1인 이상 고용하여 재화와 서비스의 생산 판매 등 영업활동을 수행해야 함</p>	<p>[유급 근로자 증빙 서류]</p> <p>○ 유급근로자 명부</p> <table><tr><th>연번</th><th>성명</th><th>주민등록 번호</th><th>입사일</th><th>연락처</th><th>비고</th></tr><tr><td></td><td></td><td></td><td></td><td></td><td></td></tr></table> <p>※ 비고 :</p> <p>1. 해당 취약계층 분류 명시 (저소득층, 고령자, 장애인 등 기재)</p> <p>2. 정규직/비정규직 명시</p> <p>○ 유급근로자가 신청기관의 소속인지 판단하는 서류</p> <ul style="list-style-type: none">- 근로계약서- 고용보험 전산망 조회(고용지원센터에서 확인) <p>[사회적일자리 상법상회사로 전환시]</p> <p>○ 포괄적 양수양도계약서(공증 필) 자활공동체, 비영리단체 등이 상법상회사로 전환되면서 사회적일자리 사업 참여 자격에 문제가 발생할 경우</p> <p>※ 고용승계 2주간 유보</p> <p>※ 인증 2주 이내에 고용지원센터 및 사회적기업 지원기관에 고용승계 완료 확인서 제출 필수</p> <p>※ 2주 이내 승계 완료 미확인시 자동 인증 취소조치</p>	연번	성명	주민등록 번호	입사일	연락처	비고							<p>[유급근로자 범주]</p> <p>○ 정규직 근로자, 비정규직(일용, 상용), 파트타임 근로자 등을 포함하여 유급근로자로 인정 (단, 대표자 및 유급형태가 아닌 자원봉사자 등은 포함되지 않음)</p> <p>※ 인정가능범위 : 월 평균 80시간 미만 단시간 근로자, 노인장기요양법에 의한 요양보호사, 장애인근로사업장 소속 근로자(직업재활 프로그램 참여로 훈련수당 받는 장애인 제외), 사업주로부터 업무, 복무, 임금 등 직접 지도 감독을 받는 파견형태의 근로자</p> <p>[정부재정지원 사업의 경우]</p> <p>1. 노동부 사회적일자리 참여 근로자 뿐만 아니라 관련 사업 수행을 위해 고용된 사람(관리인력 등)은 모두 유급근로자로 인정 (단, 인증 신청한 사회적기업 활동과 전혀 무관한 근로자는 제외)</p> <p>2. 자활근로사업의 수급자, 차상위 계층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가 아니므로 유급근로자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으나, 사회적기업의 취약계층 범위에는 포함</p> <p>34. 인증신청일이 속하는 월의 직전 6개월 동안에 고용되어 있는 유급근로자에 한함</p> <p>[유급근로자의 수]</p> <p>○ 유급근로자 수가 지극히 적어 영업활동의 실적을 판단하기가 어려운 영세 사업장의 경우 매출·자산 및 부채 규모, 지역사회·기업과의 네트워크 구축 등을 통한 자원 동원 역량, 향후 수익창출의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인증여부를 결정</p>
연번	성명	주민등록 번호	입사일	연락처	비고									
<p>[유급근로자 심사 기준]</p> <p>인증신청일을 기준으로 적용제외대상이 아닌 한 4대 보험을 가입하여야 하고, 최저임금법에서 정한 임금 이상을 지급받아야 함</p>														

4. 영업활동을 통한 수익

신 청 내 용					구비 서류		비고																
<p>인증신청일이 속하는 월의 직전 6개월 동안에 영업활동을 통한 총수입이 해당조직에서 지출되는 총 노무비의 100분의 30 이상이어야 함</p> <table><tr><th>구분</th><th>총 사업비</th><th>총노무비 (A)</th><th>총수입 (B)</th><th>총수입 /총노무비 (B/A)</th></tr><tr><td>신청서</td><td></td><td></td><td></td><td></td></tr><tr><td>검토</td><td></td><td></td><td></td><td></td></tr></table>					구분	총 사업비	총노무비 (A)	총수입 (B)	총수입 /총노무비 (B/A)	신청서					검토					[총수입 증빙 서류]			
					구분	총 사업비	총노무비 (A)	총수입 (B)	총수입 /총노무비 (B/A)														
신청서																							
검토																							
필수																							
					선택																		
					선택																		
<p>[영업활동 기간 판단 근거]</p> <p>1. 사회적 목적 실현과 관련된 영업 활동 기간만을 산정함 : 영리 목적, 혹은 사회적 목적 실현과 관계없는 사업을 위해 영업활동을 한 기간은 산입하지 아니함</p> <p>2. 재무제표 제출시 신청기간 직전 월을 포함한 6개월의 실적을 제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영업활동기간이 1년 이상일 경우에는 최소 1년 이상의 사업기간의 재무제표를 제출하도록 함</p> <p>3. 계절수요를 가진 업종(예: 농업) 등을 고려시 1년간 영업수익 평가방식 적용</p>					[총노무비 증빙 서류]																		
					선택																		
<p>[사업단이 독립된 법인 설립시]</p> <p>사실상 동일한 사업을 수행해 오면서 사회적기업 인증을 위해 새로운 조직형태를 갖추는 경우 종전 영업활동 실적 인정</p> <p>1. 비영리단체, 법인이 수행하던 사업단이 독립된 조직형태를 갖출 때 종전의 영업활동성과를 인정받기 위해서는 이에 따른 포괄적양수도계약서 작성 및 유급근로자의 고용승계를 완료한 상태에서 인증 신청</p> <p>2. 단 사회적일자리를 수행하는 사업단이 영리법인으로 독립할 때는 2주 이내까지 승계 완료함을 전제로 조건부 인증</p>					[총수입 증빙 서류]																		
					선택																		
<p>[영업활동을 통한 총수입]</p> <p>재화·서비스 공급을 통해 얻은 수입의 총액(매출액)</p> <p>1. 순수한 정부·지자체 보조금, 민간 후원금, 회비는 포함 안됨(단, 지자체 또는 공공기관 등과의 서비스 위탁계약에 따른 수입이나 바우처사업 등 포함됨)</p> <p>2. 발주처가 경쟁공모를 통해 사회서비스 제공 기관을 선정하고 계약한 경우(예: 경쟁공모를 통한 지자체 급식 사업 수행)에는 ‘지원금, 보조금 등’의 용어를 사용하는 경우라도 공공시장에 대한 영업수익으로 인정</p> <p>* 단, 법령에 의해 독점적으로 사업을 위탁받는 경우 또는 정부가 운영비를 별도 지원하는 서비스 전달체계는 배제</p> <p>* 영업수입은, 영업매출액에서 원·부자재 구입비용 등을 공제하여 자립성을 검토</p> <p>3. 매출액 계산시 부가세 제외</p>					[총노무비 증빙 서류]																		
					선택																		
<p>[노무비]</p> <p>사회적기업의 서비스나 생산에 투입되는 인력에 대한 비용(정부의 인건비 지원금도 노무비 포함)</p> <p>1. 임금(기관대표임금포함), 개인부담 4대보험료 포함한 인건비, 잡급, 시간외 수당, 상여금은 노무비에 해당</p> <p>2. 법인부담 사회보험료, 퇴직급여 총당금 등 간접노무비는 노무비에서 제외</p> <p>3. 외부 법인체에 임가공 용역 제공 시 노무비에서 제외</p> <p>4. 직접 수익사업을 담당하는 근로자 외에 법인의 사무처(행정업무담당 등)에 관한 인건비는 제외</p> <p>5. 법인(협회 등) 자체의 목적을 위해 일부 수익활동을 하나, 주된 수입원이 사회적목적 실현과 관계없는 경우에는 30%이상이라도 불인정</p>					[총수입 증빙 서류]																		
					선택																		

5. 이해관계자 참여하는 의사결정 구조

신청 내용	구비 서류	비고
<p>서비스 수혜자, 근로자 등의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민주적인 의사결정 구조를 갖출 것</p> <p>○ 의사결정 구조 : 총회, 주주총회, 이사회, 운영위원회, 운영협의회, 노사협의회 등</p> <p>○ 이해관계자 : 경영자대표, 직원대표, 서비스수혜자대표, 후원자대표, 관련시장전문가, 지역사회전문가, 자원봉사자, 연계기업, 연계지자체 담당자, 지역사회인사, 사외이사 등</p>	<p>[의사결정 구조 증빙 서류]</p> <p>○ 등기나 공증된 정관, 규약이나 운영규정 - 이사회, 운영위원회 등의 회의체에 관한 사항이 정관 등에 규정되어 있는지 확인</p> <p>○ 회의체 구성 및 운영 현황 - 사회적목적 실현 유형에 따른 이해관계자 구성 : 서비스제공형은 서비스 수혜자 대표, 일자리제공형은 근로자 대표 포함(기타형은 자율적으로 이해관계자 구성 가능) - 관계자 명단(공증 받아 제출)</p> <p>○ 공증 받은 회의록 - 실제로 운영되고 있는지, 이해관계자의 권한과 책임, 횡수, 참여자 확인</p> <p>○ 상법상의 회사의 경우 - 주주명부</p>	<p>[상법상 회사 지분구조]</p> <ol style="list-style-type: none"> 영리법인의 경우, 소유지분이나 주식을 개인이나 친인척이 과반수이상 소유해도 인정함 기업사회공헌형 사회적기업의 경우 자회사의 이익이 모회사로 편입되지 않으며 이윤의 2/3 이상을 사회적으로 재투자하는 경우 인증 <p>[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의사결정 구조 예시]</p> <ol style="list-style-type: none"> (구성) 임원, 자원활동가, 사무처, 지역본부 등에서 추천한 위원으로 구성한다. (설치 및 운영) - 이해당사자간의 의결기구인 10명 이내의 위원회를 둘 수 있다. 위원회에는 노동자 대표 1인, 이용자 그룹대표 1인 또는 그 대변조직의 성원 1인을 반드시 포함하도록 한다. - 장애인을 과반수로 구성, 당연직위원은 소장(장애인)과 근로자 대표1인, 이용자 대표1인으로 둔다 (선임) 위원회 근로자 대표하는자, 사용자 대표하는자, 정부를 대표하는자, 노동·노사관계 업무에 15년 이상 재직한자, 공인된 대학에서 교수로 5년 이상 재직한자 중에서 선임한다. 총회(비영리법인, 단체)의 경우 정회원으로 구성되며~로 기재시 ☞ 회원 요건이 정관 등에 규정되어 있는지 여부 및 실제 회원 명부 확인 필요 <p>[인증 후] 매년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제출 필수 : 지분을 변화 등 파악을 위해</p>

6. 정관·규약 구비여부 및 기재사항 준수여부

신 청 내 용	구비 서류	비고																				
<p>정관, 규약이나 운영 규정(사업단의 경우)에 다음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함</p> <p>① 목적</p> <p>② 사업내용</p> <p>③ 명칭</p> <p>④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p> <p>⑤ 기관 및 지배구조의 형태와 운영 방식 및 중요 사항의 의사결정 방식</p> <p>⑥ 수익배분 및 재투자에 관한 사항</p> <p>⑦ 출자 및 용자에 관한 사항</p> <p>⑧ 종사자의 구성 및 임면에 관한 사항</p> <p>⑨ 해산 및 청산에 관한 사항</p> <p>⑩ 기타</p>	<p>[기재사항 준수 여부 증빙 서류]</p> <p>○ 정관, 규약이나 운영 규정</p> <p>－ 비영리 법인 : 등기소 등기 또는 공증 필수</p> <p>－ 영리 법인 : 등기소 등기 필수</p> <p>○ 별도 규정</p> <p>정관 기재사항에 별도 규정으로 처리한 경우</p> <p>※ 정관 개정 시 주무부처의 허가를 득하지 않은 경우는 불인정</p> <p>※ 사업단의 고용 승계 또는 개인사업자의 법인 전환 등에 따른 양수도계약, 포괄승계 등의 사안은 공증 절차 필수</p> <p>※ 공증 : 공증 인가를 받은 합동법률사무소 또는 법무법인 또는 임명된 공증인에게 공증 받아야 함(기관 자체에서 임의로 만든 것은 불인정)</p>	<table><tr><td>①목적</td><td>당해 법인이 취약계층에게 일자리나 사회서비스를 제공하여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려 한다는 ‘사회적 목적’임을 명시</td></tr><tr><td>②사업내용</td><td>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을 하려는 것인지를 기재(주식회사의 설립의 경우 등기부에는 ‘목적’란만 있으므로 등기신청시에는 ‘①목적 ②사업내용’의 내용을 통합하여 등기부상 ‘목적’항으로 기재하여 등기신청함)</td></tr><tr><td>③명칭</td><td></td></tr><tr><td>④주된 사무소의 소재지</td><td></td></tr><tr><td>⑤기관 및 지배구조의 형태와 운영방식 및 중요 사항의 의사결정 방식</td><td>법인인 경우 최고의사결정기구(총회, 이사회)에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민주적으로 구성되도록 하고, 부득이 한 경우 운영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할 경우 운영위원회의 권한을 명확히 하여야 함. 이사회에 건의 수준에 멈추는 운영위원회의 구성은 무의미함. 이해관계자가 회원이 되어 총회에 참여하는 방식도 이론상 가능함. 다만 총회 참여보다는 이사회 참여가 좀 더 직접적이고 일상적인 것이어서 더 바람직함.</td></tr><tr><td>⑥수익배분 및 재투자에 관한 사항</td><td>재정, 재산 및 회계(수익사업, 잉여금처분, 수익의 처분 및 관리), 이익배당, 수익나눔 등</td></tr><tr><td>⑦출자 및 용자에 관한 사항</td><td>재산 및 회계, 지정, 주식, 사채, 출자와 적립금</td></tr><tr><td>⑧종사자의 구성 및 임면에 관한 사항</td><td>회원(조합원), 조직과 임원(이사·감사), 사무처, 사무국 직원에 대한 임면에 관한 사항 명기 별도규정으로 처리한 경우, 관련 인사규정이나 운영규정 제출</td></tr><tr><td>⑨해산 및 청산에 관한 사항</td><td>청산시 배분가능한 잔여재산이 있는 경우 2/3이상을 다른 사회적 기업 또는 공익적 기금에 기부한다고 명기</td></tr><tr><td>⑩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td><td>시행령11조 : 사회적사회적기업의 지부, 자원 조달, 회계에 관한 사항</td></tr></table> <p>[사업단의 경우]</p> <p>모법인의 정관과 별개로 사업단의 규약이나 운영규정 속에 법정 기재사항 10가지가 반드시 기재되어 있어야 함</p>	①목적	당해 법인이 취약계층에게 일자리나 사회서비스를 제공하여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려 한다는 ‘사회적 목적’임을 명시	②사업내용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을 하려는 것인지를 기재(주식회사의 설립의 경우 등기부에는 ‘목적’란만 있으므로 등기신청시에는 ‘①목적 ②사업내용’의 내용을 통합하여 등기부상 ‘목적’항으로 기재하여 등기신청함)	③명칭		④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⑤기관 및 지배구조의 형태와 운영방식 및 중요 사항의 의사결정 방식	법인인 경우 최고의사결정기구(총회, 이사회)에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민주적으로 구성되도록 하고, 부득이 한 경우 운영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할 경우 운영위원회의 권한을 명확히 하여야 함. 이사회에 건의 수준에 멈추는 운영위원회의 구성은 무의미함. 이해관계자가 회원이 되어 총회에 참여하는 방식도 이론상 가능함. 다만 총회 참여보다는 이사회 참여가 좀 더 직접적이고 일상적인 것이어서 더 바람직함.	⑥수익배분 및 재투자에 관한 사항	재정, 재산 및 회계(수익사업, 잉여금처분, 수익의 처분 및 관리), 이익배당, 수익나눔 등	⑦출자 및 용자에 관한 사항	재산 및 회계, 지정, 주식, 사채, 출자와 적립금	⑧종사자의 구성 및 임면에 관한 사항	회원(조합원), 조직과 임원(이사·감사), 사무처, 사무국 직원에 대한 임면에 관한 사항 명기 별도규정으로 처리한 경우, 관련 인사규정이나 운영규정 제출	⑨해산 및 청산에 관한 사항	청산시 배분가능한 잔여재산이 있는 경우 2/3이상을 다른 사회적 기업 또는 공익적 기금에 기부한다고 명기	⑩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시행령11조 : 사회적사회적기업의 지부, 자원 조달, 회계에 관한 사항
①목적	당해 법인이 취약계층에게 일자리나 사회서비스를 제공하여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려 한다는 ‘사회적 목적’임을 명시																					
②사업내용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을 하려는 것인지를 기재(주식회사의 설립의 경우 등기부에는 ‘목적’란만 있으므로 등기신청시에는 ‘①목적 ②사업내용’의 내용을 통합하여 등기부상 ‘목적’항으로 기재하여 등기신청함)																					
③명칭																						
④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⑤기관 및 지배구조의 형태와 운영방식 및 중요 사항의 의사결정 방식	법인인 경우 최고의사결정기구(총회, 이사회)에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민주적으로 구성되도록 하고, 부득이 한 경우 운영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할 경우 운영위원회의 권한을 명확히 하여야 함. 이사회에 건의 수준에 멈추는 운영위원회의 구성은 무의미함. 이해관계자가 회원이 되어 총회에 참여하는 방식도 이론상 가능함. 다만 총회 참여보다는 이사회 참여가 좀 더 직접적이고 일상적인 것이어서 더 바람직함.																					
⑥수익배분 및 재투자에 관한 사항	재정, 재산 및 회계(수익사업, 잉여금처분, 수익의 처분 및 관리), 이익배당, 수익나눔 등																					
⑦출자 및 용자에 관한 사항	재산 및 회계, 지정, 주식, 사채, 출자와 적립금																					
⑧종사자의 구성 및 임면에 관한 사항	회원(조합원), 조직과 임원(이사·감사), 사무처, 사무국 직원에 대한 임면에 관한 사항 명기 별도규정으로 처리한 경우, 관련 인사규정이나 운영규정 제출																					
⑨해산 및 청산에 관한 사항	청산시 배분가능한 잔여재산이 있는 경우 2/3이상을 다른 사회적 기업 또는 공익적 기금에 기부한다고 명기																					
⑩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시행령11조 : 사회적사회적기업의 지부, 자원 조달, 회계에 관한 사항																					

7. 이윤 사회적 목적 재투자

신청 내용	구비 서류	비고
<p><상법상 회사에 한함></p> <p>○ 정관 or 운영규정 등의 수익배분·재투자, 이익금의 처분에 관한 조항 기재 : 이윤의 2/3이상을 사회목적을 위해 사용한다는 내용</p>	<p>○ 정관 ○ 주주동의서 ○ 전기 회계연도 이윤 사용 및 재투자 내역</p>	<p>[정관 명시 내용] 정관이나 운영규정 등의 수익배분·재투자, 이익금의 처분에 관한 조항에 이윤의 2/3이상을 사회적 목적을 위해 사용한다는 내용 명시 필요 (ex) 이익금의 처리, 이익배당 * 당기 순이익이 발생한 경우 이윤의 2/3 이상을 사회적 목적을 위해 사용, 이윤의 1/3에 한해 '주주 및 질권자'에 대한 배당 허용</p> <p>[이익금의 사회적목적 사용에 대한 정관 예시] 제O조(이익금의 처분) 잉여 이익금을 다음과 같이 처분한다. 1. 지역사회 환원 2. 설비재투자·기술개발 등을 통한 사업 확장을 통한 추가 인력 고용 3. 취약계층에 대한 봉급 인상으로 근로 여건 개선(복지 강화) 4. 직업훈련 프로그램 개발 등 5. 1,2,3,4를 위한 적립 제O조(이익배당) 배당의 총액은 이익잉여금의 1/3범위 내에서 이뤄지도록 한다. * 대표, 임원, 직계존비속에 대한 성과급 지급은 불인정 * 특정 종교 조직 기부 또는 선교 사업에만 사용하는 것은 불인정</p> <p>[인증 후 1년 이상 된 기업] 이윤의 2/3 이상 사용처와 주주 동의 여부 확인을 위해 배분내역 확인서 제출(배당 전 주주총회의 의결을 거쳐 동의를 얻어야 함)</p>

사회적기업 지원내용

경영지원	재정지원	기타지원
<p>[사회적기업 지원기관 활성화 및 경영컨설팅 지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맞춤형 컨설팅 제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예비)사회적기업이 자신에게 필요한 컨설팅을 기업별 정해진 한도금액 내에서 권역별 지원기관과 협의하여 신청 - 센터(지원기관)는 (예비)사회적기업이 신청한 컨설팅 분야 및 제공기관 등을 검토하여 승인여부를 결정 - 권역별 지원기관은 컨소시엄, 협력기관, 프로보노 등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맞춤형 컨설팅 및 상시적·지속적 컨설팅의 제공을 위해 노력 <p>[사회적기업가 양성 및 지원네트워크 구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회적기업가 아카데미 운영·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회적기업을 성공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사회적 사명감과 경영능력을 갖춘 혁신적인 사회적기업가가 중요하므로 - 대학 등에 비학위 과정으로 사회적기업가 아카데미 과정 설치·운영 지원 ○ 사회적기업 지원네트워크 구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회적기업 지역별·업종별 네트워크 구축, 공동 프로젝트 개발 등 지원 ○ 종사자 교육·훈련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회적기업 종사자에 대한 다양한 교육·훈련 과정을 개설하여 사회적기업의 경영을 지원하고, 제공하는 서비스의 질 제고 <p>[프로보노·자원봉사자 연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영·법률·회계 등 다양한 분야 전문가들의 전문성 기부 및 자원봉사자들의 활동을 사회적기업에 연계하여 지속적 전문 서비스 제공 	<p>[재정 지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회적기업에 의한 사회적일자리 창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회적기업이 사회적일자리사업에 참여하여 취약계층을 신규 고용할 경우, 공모·심사를 통해 근로자의 인건비 및 사업주 부담 사회보험료 일부 지원 ○ 사회적기업의 전문인력 등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사회적기업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공모·심사를 통해 전문인력 인건비 등을 지원 ○ 사업주 부담 사회보험료 일부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회적기업이 정부 재정 지원을 받지 않는 경우 사업주 부담 사회보험료 일부를 4년 한도내 지원 ○ 사업개발비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브랜드, 기술개발 등 R&D, 시장진입 및 판로개척을 위한 홍보·마케팅·부가서비스 개발, 서비스, 판매관련 시장수요조사 연구용역비 등 사업 개발을 위한 지원 ○ 시설비 등 지원·융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회적기업 운영에 필요한 시설비나 점포 임대 필요한 자금을 저리로 융자·지원 - '10년부터 미소금융재단(휴면예금 활용)을 활용하여 지원 실시 <p>[세제 지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민간기업이 사회적기업(비영리에 한함)에 지출하는 비용은 지정기부금에 포함되어 법인 소득의 5% 범위 내에서 전액 손금산입(법인세법시행규칙 개정 '07.3.29) ○ 사회적기업은 인증 후 4년 간 법인세와 소득세 50% 감면('07.12.29, 조세특례제한법 개정) 	<p>[사회적기업에 대한 구매 지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회적기업이 생산하는 생산품이나 서비스의 우선 구매를 촉진해야 하는 등 사회적기업에게 보호된 시장 제공 ○ 사회적기업이 시장에서 원활하게 정착하기 위해서는 정부 직접적인 인건비 지원보다도 수익 창출 지원이 더 중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를 위해 사회적기업이 생산하는 서비스 등에 대해 위탁계약을 체결하는 등 공공기관이 보호된 시장을 제공할 필요 <p>[사회적기업의 인지도 제고]</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각종 매체를 통한 홍보, 사회적기업 박람회, 사회적기업가상 시상, 사회적기업 국제심포지엄 등 사회적기업 인지도를 높이기 위해 다양한 홍보를 추진